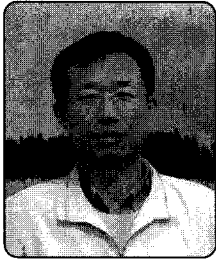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김 두 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

〈필자약력〉  
94. 8. 상수도과  
95.12. 환경기술과  
99. 6. 생활폐기물과  
03. 6. 금강유역환경청  
04. 3. 생활폐기물과

## I. 정책도입배경

1995. 1. 1.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시행 결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은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우리의 전통적인 풍성한 음식문화로 인하여 일반 생활폐기물 감소추세와는 달리 뚜렷한 감소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5. 7월 환경부, 보건복지부등 8개 기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책 추진과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범국민운동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1996. 11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젓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제한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996. 12. 5.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전문위원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게 되었다.

## II.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및 평가

### 1. 주요 추진성과

#### 가. 감량화 정책

2003년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1,398톤/일로 정책시행 초기인 1997년(13,033톤/일)에 비하여 12.5%가 감소되었다.

2001년부터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02. 2월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수칙”을 제정·보급하였다.

한편, 2002. 4월부터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음식점, 시민 및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나. 자원화 정책

감량화 정책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총 102개소의 공공처리시설(4,420톤/일) 설치사업에 78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이중 54개소(1,630톤

/일)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4년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사료화(5,928톤/일) 53%, 퇴비화(4,091톤/일) 36%, 기타(1,213톤/일) 11%로 사료화 및 퇴비화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로 사료나 퇴비를 제조하여 유통·보급시킬 경우에는 사료관리법(2001. 3. 개정) 및 비료관리법(2003. 3. 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에 등록토록 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추진 평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 기간 동안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기능강화로 자발적 협약, 환경사랑음식점, 푸드뱅크(Food Bank) 등의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을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사료화 및 퇴비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처리시설은 상당부분 설치되었으나 양호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이물질 선별시설, 염분농도 저하시설 및 퇴비화를 위한 부숙시설이 필요하나 일부시설은 적절한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정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 III.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

### 1. 발생현황

2003년말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0,736톤/일로서 이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 22.5% (11,398톤/일)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발생량(13,033톤/일)에 비해 약 12.5%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 1월 현재 분리수거율은 96%(시지역 98%)에 달하고 있어 분리수거율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0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 배출원은 가정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음식점 17.3%, 대형유통업소(농수산물시장등) 6.3%, 기타 구내식당에서 5.3%가 발생하고 있다.

### 2. 처리현황

2004. 12월 기준으로 처리시설은 253개소 (11,232톤/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공공시설이 85개소(3,239톤/일), 민간시설이 168개소(7,993톤/일)로서 민간시설이 용량기준으로 약 2.4배가 많다.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은 주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생산된 퇴비나 사료는 유상(30%)이나 무상(47%)으로 인근 농가에 공급하거나 자가 이용(23%)되고 있다.

## IV. 향후 정책방향

### 1. 정책 여건

#### 가. 발생량 전망

2001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 소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력한 감량화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나. 재활용 제품의 수요전망

국내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가축사육 두수가 증가하면 곡물의 수입물량도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외국산 수입육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축 사육두수는 현재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2004년 5월에 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9%가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59.3%가 환경오염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59%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지속한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전국 214개 지자체중에서 108개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용용기와 전용봉투 또는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분리배출 가구를 총가구수의 94%인 1,590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공동주택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다. 처리시스템의 다양화**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부분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사료화나 퇴비화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고, 사회 경제적인 제반조건을 등을 감안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라. 처리시설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70%를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고,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조기에 폐쇄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한 처리비용의 원칙 확립**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중에서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으로 충당하는 예산이 전체의 27.7%에 불과하여 처리비용의 현실화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나 국민들의 공공요금 부담과 직결되어 있

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도입취지와 배출자의 비용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적극적인 감량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비용 부담체계 확립과 처리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 재활용 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체계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로 생산한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 촉진대책으로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6월까지 기존 처리시설까지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재활용제품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인 지자체, 산림청, 농협 등 퇴비 및 사료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단체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V. 맺는 말**

우리나라의 식량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힘들여 벌어들인 외화를 앓아서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 및 운반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환경을 저해시키며, 매립과정에서도 고농도의 침출수를 발생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2005년 1월부터 매립장에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을 한다고 하여도 발생하는 양만큼 낭비가 되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감량화시켜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감량화 홍보·교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귀중한 자원이라고 판단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재활용 방법을 강구하여 재활용하도록 수집·운반차량 및 세척차량 구입비, 시설설치비와 유지보수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요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